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신분증. 내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와 사는 곳, 또는 국적까지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 신분증이 언제부터, 왜 생기게 되었는지부터 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분증의 변천사까지 알아본다.

글 편집실

‘나’를 증명하고 인증하다

신분증



피테르 브뤼헬 <죽음의 승리(Triumph of Death)>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페스트를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증이 등장했다.



주세페 몰테니
《고해성사(La confessione)》

권리와 의무, 통제의 증명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은 무리를 지어 살아왔고, 늘 어느 집단에 속해있었다. 때문에 그 집단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증명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신분 자체를 보증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문서인 신분증은 간단하게 자신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신분증의 시작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볼 때 신분증은 사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 목적 역시 신분제에 따른 구별과 조세, 병역 등 나라의 국익을 위한 목적이 주었다. 신분증 자체가 처음에는 귀족같은 상류층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권위와 여러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컸다. 또한 13세기 교회에서는 고해성사의 이행을 통제하기 위해 '고해성사 증명서'를 만들어 발급했다. 이것이 없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들을 통제했다. 또한 나라에서는

각 나라를 다니는 외교 사절처럼 중요한 임무를 가진 이들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는 상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추천서나 통행증 즉, 패스पोर्ट를 발급했다. 신분증이 자격을 표시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군사 목적으로 병사에게 신분증이 발급되었다. 원활한 징집과 더불어 탈영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14세기 유럽에 흑사병 즉,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페스트를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증이 등장했다. 특권층의 권리와 특혜를 증명하는 역할에 더해 자신의 위생을 증명하기 위한 의무적인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중앙정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 신분증(National ID)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 목적은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관료주의적 정부 부처를 수립하면서 그 필요에 의한 것으로, 1803년과 1804년 사이에 근로자들을 위한 내부용 ID 문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나폴레옹의 이러한 개혁으로 다른 나라들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다양한 나무 호패

역시 포괄적인 신분증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는데, 1844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흐무드 2세가 국가 신분증을 도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은 현대적인 의미의 신분증 시대의 개막이었다. 영국은 1938년 국가 등록법 (National Registry Act)을 통과시켜 모든 거주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독일 또한 같은 해에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후 프랑스, 폴란드, 그리스도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신분증 제도가 급속히 보급되었는데 이는 20세기 들어 식민지를 벗어나거나 독립 정부가 차려져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1949년 홍콩과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주권 강화를 위해 신분증 시스템을 시행하였고, 싱가포르는 1960년 국제 경제 성장 차원에서 신분증을 발급한 것이 그 예다.

신분의 증명, 호패

우리나라의 신분증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히 들어본 호패는 조선시대의 것이나

그 시작은 고려 공민왕 시대다. 고려 공민왕이 병사들의 징집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원나라의 호패 제도를 모방하여 병사들에게 처음 시도했으나 잘 안되었다. 이후 조선시대로 넘어와 태조 이성계 시대에 호패법을 만들어 실시하고자 했으나 무산되었고 태종 이방원이 본격적으로 호패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후 세조 5년, 광해군 2년, 인조 4년, 숙종 1년에 호패법이 시행되었다. 인조 때까지의 호패법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숙종대에 이르러야 지속해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호패법 시행이 전쟁 시 징집이나 노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국역을 부담하는 양인들의 반발이 컸고, 심지어 국역이 가중되는 부담때문에 세력가의 노비로 자신을 의탁하는 등 양인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 덕에 숙종대에 이르러 호패법을 지속해서 운영하게 된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소지하는데,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관원인 경우에만 관청에서 제작하여 지급했고, 대부분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인 이름, 신분, 직역, 거주지 등을 단자

(單子)로 만들어 관청에 제출, 관청 단자와 대조해 낙인을 받은 뒤 지급받았다. 호패의 재료로 신분을 구분했는데, 『속대전(續大典)』의 규정에 따르면 2품 이상은 아패(牙牌) 즉 상아, 3품 이하 잡과 입격자는 각패(角牌) 즉, 동물의 뿔이었으며 생원, 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같은 회양목 등이었다. 잡직, 서인, 서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 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했고, 신분이 낮아질수록 자작나무 등 흔한 잡목을 재료로 호패를 만들었다. 호패에 적히는 내용 또한 달랐는데, 상류층은 이름 정도만 적혔으며 신분이 낮아질수록 성명, 거주지 등 자세한 정보가 적혔다. 심지어 노비의 경우는 크기도 크고 생김새에 대한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했으며 주인의 이름도 함께 적혔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주민등록증

호패법은 1895년인 고종 32년 폐지되고 일본에 의해 황국신민증이 만들어져 칩락과 수탈, 징집의 수단이 되었다. 이 시기를 지나 6.25 때는 간첩 식별을 위한 도민증이 발급되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시행된 것은 1962년이었는데,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같은 해 11월 21일 주민등록 발급이 개정되고 활성화되었다. 즉, 현재와 같은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간첩 색출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통해 활성화된 셈이다. 이 주민등록증의 첫 발급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고 육영수 여사가 두 번째 발급자다. 당시 주민번호는 지금과 달리 12자리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실제 주민번호는 '110101-100001'이었다. 앞의 11은 지역(서울), 01은 종로구, 01은 청와대를 나타내고 뒤 6자리는 개인식별번호다. 1975년 주민번호가 13자리로 바뀌면서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까지도 주민등록증은 종이 형태였으나 19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여권,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지문, 홍채에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쿼알 코드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다. 🍀



18세기 문신 김희의 호패